

北 잇단 담화 위협...정부 '미온적 대응' 비판

北, 과거에도 군사적 긴장 끌어올린 뒤 '대화' 정부, 북한 의도 판단 보류하며 '예의 주시 중'

북한이 대남 '대적 선언'에 이어 군사도발 압박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대북 전단(빠라) 문제를 두고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은 그동안 상황 관리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현(남북관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남과 북은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1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후 발표된 정부의 입장 발표와 동일하다.

정부는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의 대남 비난과 위협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빠라 살포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밝아가고 있는 데도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다섯 차례나 지속된 대남 비난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며 일정 거리를 유지해왔다. 특히 군 통신선 단절 등 북한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끊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점차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단호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한반도에 위협이 가해지는 행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북한이 '선'을 넘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정부가 북한이 열을 내며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북한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한계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선 북한이 먼저 '결별'을 언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맞붙' '식' 추가 대응보다는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북측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뒤따른다.

정부는 북한이 위협적인 '말 폭탄' 이후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북 메시지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과거 북한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매설과 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부전선 포격 도발을 잇달아 벌이며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8월 22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전까지 북한은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개개고장을 통해 "전 전선에서 정의의 군사행동이 전면적으로 개시될 것이며 이는 무차별적인 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위협했다. 북한은 당시 전선사령부의 공개개고장이 '위임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겼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북한의 과거 행보도 정부가 현재 북한의 의도를 결론내는 것을 일단 사실상 보류하고 신중한 접근법을 구사하게

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참석한 행사에서 "6·15 선언은 변함없는 남북관계의 나침반"이라며 "남북관계가 방향을 잃으려 하는 지금, 6·15 정신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농어업회의소법' 대표발의

"민관협치 농어업 정책 주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을 반영하고 농어업 정책 협치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민관협치 농어업 정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 지위를 갖는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법안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

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지원 근거와 함께 적절한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농어업회의소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시해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김기태 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지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 '최소한 생계 유지' 긴급 지원사업 신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을 돕기 위해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해당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조사하는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남의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0%가 넘지만, 고용보험(33.8%)과 산재보험(28.2%), 국민연금(47.4%) 가입률은 절반도 되지 않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현실이다.

김기태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의 처우와 창작 환경이 코로나19사태로

최악인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재난 발생 시 직업인으로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술계의 미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대한 기준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의 신청인 및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등을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이달 내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민주당 지지율 42.3% ...3주 만에 반등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며 반등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세다. 양대 정당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하며 무당층 비율은

6주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6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3%로 전주 주간집계 대비 0.7%p(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인천 지역과 3040 세대, 사무직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7.1%p 빠졌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